

발전에서 행복으로: 삶의 테두리의 새로운 정의(定義)

주최 측에서 정한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한국사회 대진단: ‘발전’에서 ‘행복’으로”이다. 이 주제로 볼 때, ‘발전’과 ‘행복’은 대립되는 두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대립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둘 사이는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네이버의 지원으로 열리고 있는 “문화의 안과 밖”이라는 강연시리즈에서 몇 년 전에 이슬람문화를 전체적으로 조감해보는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 나온 질문 가운데, “오늘날 이슬람의 테러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하는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어진 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즉 “경제 발전이 정치에서 폭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었다. 경제적 발전이 보다 풍요한 삶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게 할 거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안정되고 풍요한 삶이 적어도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될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그런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발전과 인간 행복이 반드시 긍정적이 아니라는 관찰은, 가장 간단하게는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의 관점에서 쉽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세계적으로는 그것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밝히고 정책적 원리가 되게 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경제학자 팀 잭슨 Tim Jackson의 저서 <성장 없는 번영: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Prosperity Without Growth: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의 제목이다. 이 책은 2008년의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출간되었는데, 경제학은 물론 여러 분야의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잭슨 교수가 경제 성장을 인간 행복의 목표로 삼지 말자고 한 것은, 반드시 간단한 의미에서 발전을 피하지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경제 성장의 추구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이 지구 자원을 소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잭슨 교수는 이것을 보다 넓게 표현하여 지나친 성장이 “환경 위기 ecological crisis”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한다. 발전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번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잭슨 교수는 이것을 flourish라는 영어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 말은 좀 더 유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번영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영어의 flourish는 꽃이 만발하듯 무성하다는 것을 뜻하기에 경제 발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Amartya Sen에게서 빌려 온 것인데, 센 교수의 설명으로 조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센은 경제발전과 삶의 수준을 논하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풍요 (opulence), 공리 (utility), 그리고 무성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ies for flourishing) 이 세 가지다. 첫째 항목은 일상 용품의 보급이 풍부한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의 공리 또는 유용성은 풍부한 물질적 상황을 넘어, 경제를 인간적 필요와 관계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물질이 많아지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그럴 수는 없다. 잭슨-센의 통계에 의하면, 미영 일(美英日) 국가에서 점검한 삶의 만족도는 GDP에 관계없이 1950년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세 번째의 특성은 생명이 꽃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식사에서 적절한 영양을 취할 수 있고, 쉽게 병에 걸리지 않아,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이 있어야 하고,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식주가 만족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교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잭슨 교수의 저서에는 인도주의적 윤리 이념을 여러 가지로 고찰하는 철학자 마쉴 넛스바움 Martha Nussbaum의 견해를 빌려 온 것이 나와 있다. 넛스바움 교수에 의하면 지켜낼 만한 인간의 잠재력으로, 1)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신체적 능력, 2) 온전한 신체의 보존, 그와 함께 성관계와 출산에 있어서의 선택과 만족의 자유, 3) 인생을 삶에 있어서 적절한 이념을 형상화할 수 있는 실천 이성, 4) 타인과 교류하고 동거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관계, 5)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이 이야기된다.

그런데 경제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이러한 분석에는 정신적 차원에 대한 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넛스바움 교수는 철학자이지만, 그의 접근도 조금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넛스바움 교수가 발붙이고 있는 철학은 윤리의 현실적 근거를 중요시한 헬레니즘의 철학이다. 어떻게 현실적인 인생을 철학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현실과 매우 타협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번 심포지움의 대주제에 들어 있는 “행복”이라는 말도 자칫하면 지나치게 인간 심리의 세속적인 면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공리주의 계산이 그러한 생각의 기준이다.

‘행복’은 인간에게 자기실현의 요구에 맞는 삶을 사는 데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자기실현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형편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형편이 그의 본성적 요구를 형성한다. 또 중요한 요인은 사회에서 온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더 본질적으로 자연에 대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는 부분적일 수도 있고 전체적일 수 있다.

자연은 단순히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자원만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심미적 감성에 호소하고, 또 그것을 넘어 삶 전체의 배경이고 토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미학(美學)에서 작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큰 아름다움, 거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용하는 말에 숭고미(崇高美)가 있다. 그것은 미적 감성도 자극하지만, 자연에 대한 경외심(敬畏心)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성리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류의 윤리와 종교 체험에서도 중심이 되는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말한바 자기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자기형성은 그 기초에 겸허의 마음을 둬으로써 가능하다. 겸허란 작은 것을 줄이고 큰 것에 복종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금욕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숭고한 존재의 깊이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기회에서 일정한 선택을 수행하고, 그 선택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철저한 의

미에서의,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욕주의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간적인 심미적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발전'에서 '행복'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건일 수 있고, 또 환경적 거시경제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존재 방식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행복'으로의 이행이 삶의 정신적 선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것은 자기를 버리는 금욕주의일 수도 있다. 종교에 성스럽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어떤 독일의 철학자는 '완전히 나와 다른 타자에 승복하는 것' 이라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 물건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더 큰 타자에 승복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의 관점에서이든 정신의 관점에서이든 심오한 접근도 요구한다. 이것은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매우 심각한 선택일 수 있다.

한국정치 진단, 협치의 길

한국정치를 진단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 '극한대결'이라는 네 글자다. 사실 의회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대화와 타협인데 한국 현실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운영원리가 이뤄지는 걸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여야 간 극한대결 때문에 의정이 마비되어 효율적 국정운영이 어려운 걸 오래 봐왔다.

한편으로 이해가 맞을 때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여야 정당 둘이 다른 제 3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언제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극한대결과 적대적 공생관계 유지라는 구조속에 오래된 양당체제가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이 극한대결의 원인이나 책임을 따져보면 저는 대통령들의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그렇다고 본다. 첫째로 대통령이란 자리를 헌법적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시대 임금처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정 원리를 초월하는 존재인양 착각하는 모습을 매번 보이고 여기서 많은 폐단이 생겼다.

둘째는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인 대의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여당을 통치도구화해 국회를 지배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정책을 내놔는데 야당이 맨날 비판하고 토론하자면 서 시간 끄니 여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통과시켜 집행하겠다는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이는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에 투쟁할 때 “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민주화된 오늘날 그럴 때가 많다.

그런데 촛불시위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대결의 성격이 조금 변하는 조짐이 있다고 봤다. 정권이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국체(國體)나 정체(政體)를 비합법적 수단이나 물리적 힘으로 바꾸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촛불시위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다. 이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책을 펴냈는데, 거기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왜 시위에 나오느냐 물었더니 '민주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혁명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혁명이 아닌 민주적 제도와 절차, 그것을 운영하는 민주적 규범을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사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개월 쯤 후인 2017년 7월에 문재인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총론에 국민주권을 첫째로 강조하는 게 보인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적으로 해석하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의제도를 존중하지는 않는 태도라고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인수위에서 연설한 중

에 이런 대목이 있다. '국민은 4년을 기다렸다 투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가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정 비효율이 빈번하게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간접 민주주의 문제를 보완하자 해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분출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 다수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책에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이에 분노해 촛불시위 참여했다'고 대답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 이런 국정 5개년 계획과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 전체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일상의 정치를 광장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협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민주주의 운영원리를 충실히 지키면 저절로 이뤄지는 게 협치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고 한다. 이걸 헌법적 기능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정당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정지원까지 한다. 그러면 각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 가서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복수정당이 있으니 자연히 갈등이 생긴다. 이 갈등은 생산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우선 대화와 타협이다. 그게 정 불가능하다면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의안은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회민주주의 운영원리가 바로 협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 국민의 집단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 협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게 결국 통합인 것이다. 협치나 국민통합이 의회민주주의와 별도로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집권여당은 대통령도 강조하는 협치나 통합하고 관계가 먼, 협치를 파괴하는 것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게 사실이다. 작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초과하는 180석 가까이 얻은 이후에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의안을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물론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그 원리에는 소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라는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다보니까 학계에서는 이런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선거독재 아니냐. 혹은 대중독재 아니냐. 법의 지배가 불가능한 전제정 아니냐.'는 극단적 문제제기까지 있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새로 취임한 야당 대통령은 2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가졌으니까 호락호락 대통령이 나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법률안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취임 후 2년을 보내야 한다. 만약에 지금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야당이 어떻게 반대하든 간에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국회가 야당 극렬반대로 또 국정운영에 지장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협치가 이뤄지는 걸 국민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경제, 불평등을 넘어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에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도 문제이지만 가장 핵심, 출발점은 불평등에 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가 성장도 고용도 높이는, 삼박자를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의 불평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최근 문재인정부 이후에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좌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탈, 노동의 불평등(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 간의 임금격차) 등 많은 불평등이 있다. 이런 문제를 교정할 최후의 수단은 '재분배',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빈약하다.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헨리 조지, 피케티, 링컨, 루즈벨트, 샌더스 등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만하다.

피케티의 삼부작 '21세기 자본', '세계 불평등보고서',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큰 시사점을 준다. 국가별 상위 1퍼센트 부유층의 지난 100년 간 소득 변화를 비교한 '21세기 자본'의 그래프에 따르면 20세기 초에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가, 20세기 중반부터 40년간은 낮아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피케티의 이 그래프 방식을 적용한 결과, 한국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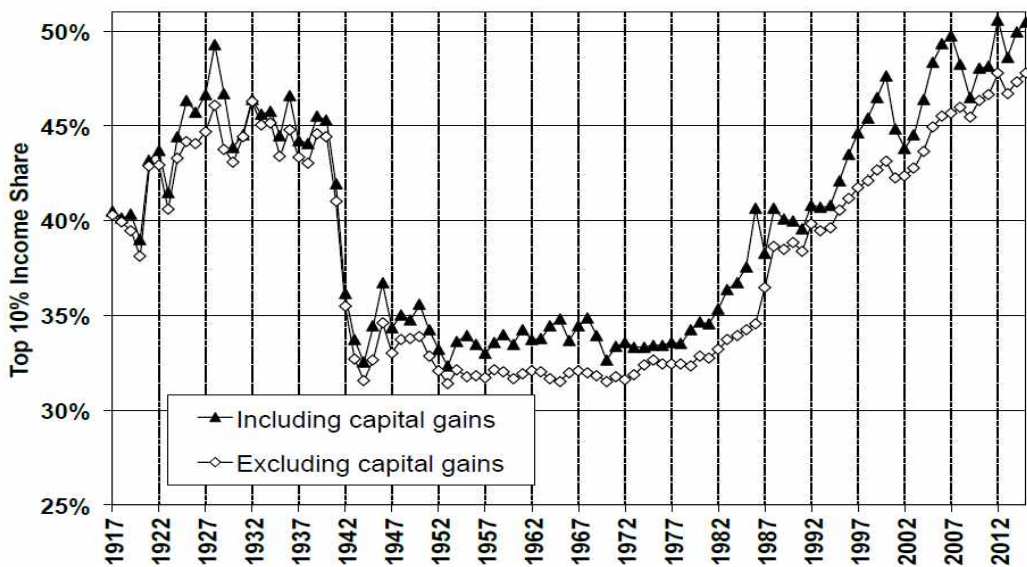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상위 10%의 소득 몫, 1917-2015 (Saez, 2016)

그 중에서도 미국은 20세기 초, 특히 1920년대에 불평등이 아주 높아졌다가 대공황과 2차대전 기간에 급격히 낮아지며 평등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가장 평등한 40년이 지속된다. 1980년에 불평등이 다시 높아지는데 이는 레이건과 부시 부자 등 공화당 정권의 보수적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경제정책이 1920년대부터 10여 년간 불평등을 키우며 대공황을 초래한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부자감세, 작은 정부, 규제완화, 친기업, 반노조)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정책이 반복된 결과 불평등이 정점에 도달하고 2008년 제2의 공황이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1929년 대공황의 파국을 치유한 루즈벨트의 뉴딜 개혁의 업적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횡포에 대한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이다. 그 이전까지 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사회진화론, 시장만능주의가 판치던 미국에 역강부약(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최저임금, 노사단체협약, 복지제도가 모두 이때 시작되었다. 분배가 가장 평등했음에도 4퍼센트의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황금시대였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당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루즈벨트와 비슷하게 오바마도 제2의 대공황이 일어난 2008년에 집권했다. 공화당의 거둬들인 실정과 극에 달한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분노한 민심을 업고 압승을 거둔 것이 루즈벨트와 오바마의 공통점이었으나 경제정책은 완전히 달랐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6년 대선의 트럼프 승리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심이 일으킨 이변이었다.

한국은 복지기피국가형 미국과 토건국가형 일본의 혼합형이다. 복지를 기피한 결과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한국만큼 급격한 출산을 저하를 보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 2050년이면 세계2위의 노인국가가 되는데 1위는 일본이다.

1920년대 미국의 보수정권이 실패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80년 뒤 한국에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줄푸세 공약'은 80년 전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일으킨 공화당의 정책을 여과장치도 없이 직수입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의 세금규모는 OECD에서도 가장 낮은 규모에 속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세계은행)이다. 그런데도 규제를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는 친기업, 반노조 정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살길일까?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장 평등했던 시기에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갈 길은 분배의 평등을 실현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뉴딜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으나 내용은 빈약했으며 미온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은 빛을 잃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은 첫째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보유세 강화), 둘째로 복지강화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증세 강화)이다.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것을 정부 초기에 국민에게 호소하고 부탁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모험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로 대기업의 갑질(기술탈취, 가격후려치기 등)을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혁신성장을 하되 소득주도성장도 동시에 필요하다. 보수정당에서는 혁신성장만을 강조하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라야 더 안전하게, 높이 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한편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소득주도성장 담론이 사장되고 말았는데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과 여러 나라의 황금시대 사례를 보더라도 불평등을 줄이는 뉴딜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동시에 하면 분배의 개선, 경제성장, 완전고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40여 년 계속된 현상이

므로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벌개혁, 복지증세, 비정규직 등 중첩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만 한다. 기재부, 공정거래위, 복지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까지 포함시켜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식민지배 관계였던 영국의 국민소득을 2002년에 추월한 아일랜드의 기적은 우리에게 계도 가능하다. 혁신성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발상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공통질문 : 코로나 사태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김우창 명예교수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정부도 그런대로 해나가고 있고 국민이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집단적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는 상태다. 그러한 훈련에서 나오는 걸 지켜나가면서 의료체제에서 나오는 여러 조치가 강화되면 저절로 코로나 위기는 약화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가 되돌아 올 거다.

윤여준 전 장관 :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바뀐다 해서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도중에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쓰니까 뉴노멀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새로운 기준을 뜻하는 것 같다. 그우리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다 많이 바뀐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대대적으로 바꿀지 지금부터 상당히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정우 명예교수 :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아주 심대하다.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 식당이나 노래방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파국이 오면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규모다. 규모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퍼주기’라는 비난을 퍼붓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객관적 수치를 보면 대단히 인색하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을 거쳐서 지급한 액수가 81조원인데 얼핏 보면 커 보이지만 국민소득의 4%에 불과하다. 유럽과 미국은 대체로 10~13%로 우리의 세 배다. 그런데도 퍼주기라던가 국가가 재정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고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세계 강대국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떻게 국가를 재구조화 할 거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공통질문 :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거쳐 왔는데 내년 차기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시대정신이나 국정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김우창 명예교수 : 문화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문화적 발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인데 내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만 가지고 공동체가 인간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와 동시에 그에 대비되는 절대적인 도덕률을 얘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도덕률을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도덕률을 따를 수 있느냐. 내적인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도덕률을 따르는 게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과도 관련 있지만 문화적 발전과 관계되어 있다. 문화적 발전은 그런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문화 사업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큰 사원이다. 쾰른 성당은 완성하는데 800년이 걸렸다. 쾰른 성당을 완성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을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된다. 영국 시인의 시에 보면 프랑스 남쪽 성당에서 떨어져 나온 벽돌에 노동자 이름

이 새겨진 걸 보고 놀랐다는 게 적혀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성당 건축에 참여하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다는 거다. 이처럼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공동체적 존재다. 스스로 깨달으면서 일을 했다.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력과 도덕률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건 교육과 책에 의해서도 이뤄지지만 밖에서 이뤄지는 손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성취에서도 나타난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교향악단이 많은데 지방 정부들이 다 지원을 해준다. 독일은 지방 정부가 강하니까 지방 도시에서 미술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것이 결국 보조금을 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냐 걱정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결과가 없는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사람도 독일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조각 미술 이런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다. 우리도 작은 문화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유롭게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집단에서 활동하려면 규율을 지켜야하니 규율과 도덕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여준 전 장관 : 우리가 산업화 시대다, 민주화 시대다 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 그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산업화다, 민주화다 라고 하는 것 같다. 우선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저는 ‘공공성의 회복’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한 것 같다. 공공성은 국가라는 거대한 정치공동체를 묶어주는 핵심 가치라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제도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것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이정우 명예교수 : 윤여준 선생님이 ‘공공성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가 너무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고 각개약진, 시장만능, 각자도생이 심해서 약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다. 한 가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거의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는 많은 전진을 이룬 것이 사실인데 조직 내부 민주화는 아직 안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갑질, 성희롱, 성추행,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자살사건이 일어난다. 아직도 각 조직이 민주화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저는 시대정신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질문 : 정치 부분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님께 질문 드린다. 지금 이준석, 박용진 등 청년정치 현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는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청년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대교체 현상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87년 이후 형성된 극단적 양당제에 대해 어떤 해소방안이 있을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여준 전 장관 : 국민의힘에서 뜻밖에 일어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오랫동안 발전지체 상황에 빠져있던 한국정치가 큰 도약을 준비하는 조짐으로 보기 때문에 반갑기 그지없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젊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10년 하다 보니 30대 초반이던 그 분들이 지금 40대 초반이 됐다. 지금 20대~40대가 공통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앞으로 정치지도자 되실 분들은 결국 이런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공성과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한정 추구하면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단 우선적인 문화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개헌 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개헌을 지금 제안하는 분은 2024년에 본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 저 같으면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출마를 해봄 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5년 임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만일 2년 안에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과거처럼 정치지도자나 학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한 후에 개헌을 통과시킨 다음에 총선 일정 맞춰서 퇴임해주면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 아닐까?

질문 : 경제 부분에 대해 이정우 교수님께 질문 드린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 새로운 복지시스템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장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복지의 미래에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한국 경제에서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명예교수 : 현재 기술 발전의 격변 시대고 거기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려면 신기술 투자가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가 가장 구조조정을 잘하고 유연안전성 모델이 작동을 잘하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가 아직도 복지를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4차 산업이나 5G로 가자는 건 연목구어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모험투자와 벤처가 가능하다. 그 내용이 기본소득이나 신복지나 논쟁이 있지만 저는 기본소득과 전통적 복지 둘 다 필요하고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의 이중구조는 문제인 정부 이후 비정규직이 다수 줄어들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이 최근에 와서 무기계약직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형식은 정규직이 됐으나 내용상 못 따라오고 있다. 그 점에서 예산도 필요하고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나라고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중 2등과 3등을 찾아보면 스페인과 일본이다. 스페인은 수년 전 이것을 크게 해결했는데 그 방식이 비정규직 기간제와 계약직을 쓰려면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다 허용해주다보니 과도하게 인건비 절약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유제'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또 현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 없이는 안 된다. 제가 속한 한국장학재단 안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여전히 있고 현저한 보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한테 힘이 없고 예산을 가진 기재부가 예산을 주면서 해결해보라고 해야 한다.

질문 : 윤여준 전 장관님께 질문 드린다. 거대 양당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당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윤여준 전 장관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등장 전이면 몰라도 이후로는 거대양당정치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본다. 거대양당 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국민의 기대가 남아있으면 제3지대를 열기란 쉽지 않다. 최근 국민의 힘은 박근혜 탄핵으로 심판받았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미 국민이 양당을 다 심판했으니까 드물게도 이 제야말로 제 3세력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 가져가버렸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은 제3세력등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질문 : 이정우 교수님께 젊은이들의 주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번 생은 틀렸다는 자조적 얘기들을 하고 있다. 자산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 대한 포괄적 기치를 내걸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정우 명예교수 :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하다. 집값이 아니라 땅값이 올랐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 20억 하는데 아파트 시멘트 건물 자체 아무리 합쳐도 20억 안 된다.

이것을 잡으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첫째로 토지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 토지보유세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문재인정부 첫 1년간 부동산정책을 10번이나 하면서도 신뢰를 점점 잃다가 지금에 와서야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해도 안 믿는 분위기까지 왔다. 그래서 정권초기에 천명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엄청난 불로소득이므로 중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중과하면 동결효과로 집값 하락을 방해한다. 보유세와 양도세,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정책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고도의 정밀한 기술과 타이밍이 요구된다.

부동산을 통한 양도소득이 1억을 넘을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은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양도세를 봐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표를 잃을까 겁내서 몇 번을 이사하면서 불로소득을 획득해도 봐주기 한 결과, 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만들고 부동산 투기의 천국이 되었다. 표와 인기를 버리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을 보장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낸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

질문 : '발전에서 행복으로'라는 담론을 가장 많이 고심하고 천착하신 김 교수님께 마무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우창 전 명예교수 : 협치라든지 방역문제, 평등문제도 그렇지만 거기에 정신적인 기초가 있어야 한다. 문화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협치는 서로 대립하다가도 피로감으로 인해, 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호존중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수양이 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싸워서 해결할 도리밖에 없다. 사실 존중보다는 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양쪽을 다 살려가되 최종적으로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향상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도 협치하고 경제 평등도 실현하면 좋겠다.

평등을 실현하는 동력에는 '너만 잘 살기냐, 나도 잘 살아보자' 이런 분노가 계기가 되어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생명도 귀중하고 내 생명도 귀중하다' 하여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양쪽 모두 필요하다. 투쟁을 통해 평등을 쟁취하는 것도 정치적 동력으로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건 상대방과 나의 생명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다. 생명 가진 존재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치인 만큼,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겠다. 나만 살겠다는 사회는 살벌한 사회가 된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 자연현상에 대한 존중이 연결되어야 한다.

[마무리 말씀 - 이사장 법륜스님]

바쁘신 중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선생님과 사회자님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세 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경제가 성장했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됐다. 또 사회가 민주화됐지만 상호경쟁하는 민주적인 협치가 아니고 상대를 적대하는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를 넘어선 지나친 정치적 갈등에서 어떻게 협력관계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삶을 만족하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의식주의 해결 여부 등)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것 같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옛날보다 나은가’이고, 또 하나는 ‘주변국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어쨌든 나아졌고,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주변에 있던 어려운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 자긍심 위에서,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 존재하는 권위주의, 갑질 등 소위 내용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민주주의, 정치적 협력관계의 부족, 경제적 사회안전망 부족과 양극화 심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개선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개선해나갈 때도 좋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로 인한 찬반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의 바탕 위에 설 때 이런 문제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괜찮다 하지만, 이 정도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인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 요행히 지난 70년간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마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놓인 남북이나 미중 대립 상황은 전쟁의 위험이 상당 부분 상존해 있다. 사회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쾌락적응’ 현상이 있다.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는데, 지속되면 고마움도 없어지고 만족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성장이나 제도개혁만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경제성장 초기나 독재에서 민주화될 때에는 굉장한 행복감을 얻지만 이내 당연시되어 버리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유의한다면, 욕망의 충족이나 사회제도만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빈곤국가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에서는 어렵다.

과거에 비해 300배정도 경제가 성장했는데 과연 그때보다 2배 이상 행복한가?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데에 정신적인 만족감, 김우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아실현, 인간관계와 같은 어련 새로운 대안들이 좀 더 보충되어야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오늘 세 분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심화, 발전시켜 더욱 깊이 있게 토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